**신형 한중관계 구축: 한중동맹은 대안인가**

**이춘복(李春馥)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진핑 시기 추구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국 외교로 대표되고 있고 한반도는 양자의 중첩점에 있음.

-한중관계는 신형 주변국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되고 있음. ‘한중동맹’ 담론은 궁극적으로 한중 간 장기적인 협력의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1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성격**

1) 동아시아 국제관계

○ 동아시아의 안보구조: Hub-Spoke 체제

-미국중심: 미일, 한미동맹 vs 중국 구도

신 남방 3각 관계 vs 북방3각 관계

한미동맹 vs 조중 우호협력호조조약

○ 역사-안보 길항관계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 미중 양극체제: 경쟁적 협력관계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북한문제에서 한중협력공간과 한미동맹의 유효성과 한계

\* 한국은 한중일, 한미중, 한미일 3각 관계에서 중간지대에 놓여 있음.

-미중과 공동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

2) 동맹론과 한중관계의 성격

○ 관계 유형: 적대, 협력(Coalition), 중립, 제휴(alignment), 동맹(alliance)

-군사동맹: 유사시 조약 체결국 간 상호 군사지원을 하거나 중립을 지키거나 상호협의 및 상호협력을 하도록 성문화된 공약.

-군사동맹의 유형: 방위조약(defense pact), 중립조약(neutrality pact) 또는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협상(entente)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NATO; 독일-소련 불가침조약(1939), 일소중립조약(1941); 프랑스-러시아 협상(1894), 영국-프랑스 협상(1904)

-제휴: 국가 간 미래 안보협력에 대한 비공식연합(정치적 지지와 암묵적 합의).

○ 한중관계의 성격

-영토갈등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한일, 중일 관계와 다름.

-북중조약이 성문화되어 있으나 북 핵/북한 문제를 둘러싼 협력,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수호,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체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존재하나 미국, 일본이 추진하는 가치외교 차원으로 격상되지 않는 한 구조적 근본 갈등은 아님.

○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한중 간 안보협력의 폭과 깊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와 국지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장기간 경색과 단절로 오는 불안정 극복을 위한 협력.

○ 중장기적으로 통일추진외교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중협력을 실질적으로 심화하고 폭을 확대할 것.

**2. 시진핑 시대 외교정책과 대 한반도정책**

1)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 영향력 확대와 양호한 주변 환경 조성의 동시추구

-주변국외교에 관하여 과거 ‘비동맹외교’에서 점차 탈피하여 ‘제3국을 겨냥한 동맹금지’를 강조하는 중국식 ‘선린우호협력조약’을 강조하고 주동적으로 제안하면서 양호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고 있음.

-러시아(2001), 파키스탄(2005)에 이어 아세안과의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주동적으로 제안한 것이 대표적 예임.

○ 선린우호협력관계

우호국가 확보전략-최소한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 확보

-중국의 이웃국가 친구 만들기(Binding policy) 전략

-비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식 실질적 동반자관계인 “상대가 상대에 대한 적대국가나 그룹에 가입하지 않는” 원칙을 추진하고 있음. 법률의 형식으로 이들 국가들과 양국관계 장기발전의 기틀을 마련함.

\* 특히 선린우호조약은 상대의 주권, 안보와 영토완정에 손해를 끼치는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적대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본국에서 상대국의 주권, 안보와 영토완정을 훼손하는 조직이나 세력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비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볼 수 있음.

2) 대 한반도정책

○ 시진핑 정부(2013-2022) 대 한반도정책은 임기 초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임.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식 해법 강조.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외교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대한 이익을 지닌 관심사항’지역으로 한반도를 처음 명시적으로 언급, 미국에 ‘핵심이익’에 대한 상호존중과 더불어 ‘중대한 관심사항’(북한의 이유 있는 안보우려)에 대해 고려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음.

-시진핑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확고함. 중국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해지고 실제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북중 관계에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포착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북중 관계의 질적인 개선과 발전은 어려울 것임. 작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또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북핵문제에서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조건부 지지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임. 미중 모두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 원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충돌의 가능성과 통일한국의 친미/친중 성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현상유지 플러스 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새로운 형세 하 북핵문제의 복합성과 한중 동맹론의 한계**

1) 새로운 형세 하 북 핵/북한문제의 복합성

○ 우크라이나 사태와 리비아 사태는 북한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지만 소련 해체이후 독립하면서 1994년 당시 핵 폐기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독립을 보장해주고 에너지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

-그러나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인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막을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완정, 그리고 안전보장을 약속한 미국과 영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리비아 역시 핵 폐기 결과 내전발생 후 NATO가 반정부군을 지원하면서 개입하게 되는 화근이 되었음. 북한에게는 핵개발에 더욱 집착할 요인이 될 것임.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판짜기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미국이 전향적인 대북정책 변화가 힘들고 북한도 먼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여 북 핵 해법으로서 우크라이나 모델의 마이너스 역할을 북한이 최소화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

-결국 고리는 안정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중협력 추진과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임. 한국의 역할과 한중협력이 중요한 시점.

2) 한중 동맹론은 득보다 실이 큰 전략으로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략

○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긴장관리(북 핵, 미사일 등)의 주도권 확보는 한국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최소한의 조건임.

-남북관계 개선 없는 한중관계 발전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남북관계 개선의 모맨텀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할 때 비로소 동북아 강대국들과 외교에서 진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중 간 접점을 찾고 협력의 모맨텀을 찾아야 할 것임.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주장하고,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도 궁극적으로 안정된 남북한 관계를 바라고 있음.

○ 한중 동맹론은 중국의 시각에서 불가능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한중동맹은 북한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질적인 개선 어려움. 북중/미중 간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불리함.

○ 한국의 입장에서도 분단된 상황에서 섣부른 한중동맹 추진은 북한의 반발로 비롯된 남북관계 대결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

-한중동맹 추진보다 한미군사동맹의 범주를 북한의 도발억지와 위협관리, 등 방어적 목표에 주안을 두는 것이 더욱 필요.

**4. 신형 한중관계의 구축: 포괄적 파트너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한중 간 이슈/상황별 포괄적 협력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 한국의 외교입지를 강화하고 넓힐 수 있는 한국 중심의 북 핵 외교, 신뢰 증진외교, 평화 촉진외교가 필요할 때.

○ 한중관계의 강화가 북중 관계의 경색과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됨. 한중관계의 진전과 신뢰강화가 궁극적으로 북중 간 신뢰와 협력증진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억지와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협력.

○ 중국과 중장기적으로 북 핵과 한반도안정에 대한 로드맵과 해법을 공유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통일 지지하게 하는 것.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정권의 연착륙과 연성화는 궁극적으로 핵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와 국제사회의 단계적 대북제재 해소가 병행으로 추진 가능. 중장기적으로 북중경협 강화를 통한 북한 내 ‘밑으로부터 시장화’ 활성화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

-현상유지 플러스 정책을 통한 점진적인 실질적 평화 안정 나아가 사실상의 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자신감을 갖고 기존 동맹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을 이겨내야 할 것임.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 요청에 따른 미국이 제시하는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참여압력 등 한국정부가 얼마나 효과적 대응하는가 문제임.

-한·미·일 3국의 정보보호 군사협정의 형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군사력, 정보력과 국방력 자주강화가 필수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

○ 미국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 삼각협력관계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본과도 정상적 외교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질서 개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규범과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야